회계학개론

※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연(年)이자율이며,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산문제에서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는 경우 가장 근사치의 답을 선택한다. 위의 조건 하에서 각 문제의 답지항 중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투자부동산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지 않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② 종업원으로부터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사용하는 부동산은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장래 자가사용할지 또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토지는 자가사용부동산이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에게 보안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한다.

2.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원가에 해체, 제거 및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한 원가를 관련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한다.

②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단한다.

③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의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 조정한다.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한다.

⑤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3.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될 수 있는 것은?

① 최초 인식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손익

②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④ 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⑤ 관계기업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

4.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이 아닐 경우에는, 종속기업인 투자기업을 통해 지배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②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④ 지배기업이 소유한 종속기업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이다.

⑤ 피투자자와의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되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된다.

5. 20×1년 12월 31일 (주)세무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의 90%가 소실되었다. (주)세무의 이용가능한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자산의 추정 손실금액은? (단, (주)세무의 매출은 모두 신용거래이다.)

기초재고		₩150,000	당기매입액		₩12,000,000
매출채권(기초)	₩80,000		매출채권(기말)	₩120,000	
손실충당금	(8,000)	72,000	손실충당금	(10,000)	110,000

○ 당기 매출채권 현금회수액: ₩11,500,000
○ 당기 회수불능으로 인한 매출채권 제거 금액: ₩5,000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총이익률은 40%이며 큰 변동은 없었다.

① ₩4,696,920 ② ₩4,700,700 ③ ₩4,704,480 ④ ₩5,223,000 ⑤ ₩5,268,000

6. (주)세무는 20×1년 초 가건물이 있던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기존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원가는?

토지구입대금	₩200,000	토지소유권이전비	₩3,000
토지의 정지 및 측량비	50,000	진입로 공사비	30,000
건물신축 허가비	25,000	가건물 철거비	18,000
신축건물 공사원가	150,000	가건물 철거 부산물 매각수입	5,000
건축설계비	15,000	토지분 재산세	4,000
건물등록비	20,000	울타리 설치공사	13,000

① ₩185,000 ② ₩210,000 ③ ₩223,000 ④ ₩228,000 ⑤ ₩241,000

7.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7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다음 자료에 근거할 때, 20×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지배기업 소유주 당기순이익은?

○ 20×1년 1월 1일 연결분개

(차)	자본금	200,000	(대)	투자주식	240,000
	이익잉여금	30,000		비지배지분	90,000
	재고자산	10,000			
	유형자산	60,000			
	영업권	30,000			

○ 위 분개에서 재고자산은 당기에 모두 처분되었으며, 유형자산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1년도 (주)세무와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20×1년도 중 (주)세무와 (주)한국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① ₩49,000 ② ₩55,600 ③ ₩62,600 ④ ₩64,000 ⑤ ₩71,000

8.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의 법인세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
○ 세무조정사항:	
- 정기예금 미수이자	₩200,000
- 접대비한도초과액	150,000
- 벌금과 과태료	70,000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50,000
○ 법인세율은 20%로 유지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① ₩214,000 ② ₩244,000 ③ ₩258,000 ④ ₩288,000 ⑤ ₩298,000

9.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다. 20×1년 12월 20일 외상으로 구입한 재고자산이 선적지인도조건으로 기말 현재 운송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고, 동 재고자산은 기말 재고 실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오류 수정 전 재무비율 산정 시 분모·분자 값은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① 20×1년도 매출원가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높다.

② 20×1년도 총자산회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③ 20×1년도 말 현재 당좌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④ 20×1년도 말 현재 부채비율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⑤ 20×1년도 총자산이익률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낮다.

10.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① ₩180,391 ② ₩191,300 ③ ₩199,091 ④ ₩200,391 ⑤ ₩202,466

11. (주)세무의 20×1년 말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당좌개설보증금	₩10,000	당좌차월	₩1,200
당좌예금	( )	우편환증서	4,000
차용증서	1,000	수입인지	500
소액현금	300	배당금지급통지서	1,500
종업원 가불증서	2,500	환매채	1,500
타인발행약속어음	10,000	정기예금	2,000

<추가자료>

○ 아래 사항을 조정하기 이전 은행측 당좌예금 잔액은 ₩12,800이다.
- 거래처에 상품 매입 대금 결제로 발행한 수표 ₩7,500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
-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으로 입금 통보한 ₩2,800을 (주)세무는 회계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전산장애로 인해 입금처리하지 못했다.

○ 환매채의 취득일은 20×1년 12월 1일이며, 4개월 후 환매조건이다.

○ 정기예금은 1년 만기이며, 만기일은 20×2년 1월 31일이다.

① ₩12,100 ② ₩13,900 ③ ₩15,400 ④ ₩15,900 ⑤ ₩25,100

12. (주)세무의 20×2년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된 항목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당기순이익	₩200,000	매출채권 감소	₩15,000
이자수익	20,000	매입채무 감소	12,000
이자비용	35,000	미지급급여 증가	6,000
법인세비용	40,000	이자지급	26,000
감가상각비	50,000	이자수취	18,000
기계장치처분이익	8,000	법인세납부	42,000
재고자산 증가	25,000		

① ₩223,000 ② ₩231,000 ③ ₩239,000 ④ ₩281,000 ⑤ ₩311,000

13. (주)세무의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처음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 전환가격 ₩100)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환되지 않았다. 20×1년 당기순이익이 ₩1,500,000,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120,000, 법인세율이 20%일 때, 희석주당이익은? (단, 계산에 필요한 기간은 월 단위로 한다.)

① ₩632 ② ₩638 ③ ₩672 ④ ₩750 ⑤ ₩798

14. 금융자산의 재분류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하며,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는다.

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경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15.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운반구(취득원가 ₩6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6년,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는 매년 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조정하고 있다.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20×2년 인식해야 할 당기비용은? (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년 말	20×2년 말
₩550,000	₩374,000

① ₩16,000 ② ₩66,000 ③ ₩110,000 ④ ₩126,000 ⑤ ₩176,000

16. (주)세무는 재고자산을 소매재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으로 가정하며 원가율은 저가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의 매출원가는?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	₩9,000	₩8,950
당기매입	64,410	94,100
매입운임	420	-
매입환출	230	-
매출액	-	98,000
종업원할인	-	2,000
순인상액	-	900
순인하액	-	700

① ₩61,200 ② ₩66,640 ③ ₩71,300 ④ ₩71,374 ⑤ ₩71,390

17. (주)세무는 (주)한국에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이자부약속어음(액면가액 ₩160,000, 5개월 만기, 표시이자 연 9%)을 받고, 이 어음을 2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서 할인하여 ₩161,518을 수령하였다. 동 어음할인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한다. 이 어음 거래에 적용된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한다.)

① 10.2% ② 10.4% ③ 10.5% ④ 10.6% ⑤ 10.8%

18.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취득원가 ₩550,000, 잔존가치 ₩10,000, 내용연수 10년)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00,000으로 추정되어 손상을 인식하였다. 20×4년 말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340,000으로 회복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20×2년 말 장부금액은 ₩300,000이다.

② 20×2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142,000이다.

③ 20×3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36,250이다.

④ 20×4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80,500이다.

⑤ 20×4년에 인식하는 손상차손환입액은 ₩112,500이다.

19. (주)세무는 20×1년 초 5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다. 20×2년 말 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후 사채의 장부금액이 ₩84,000이 되었다면, 20×3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차)	이자비용	8,200	대)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
				현 금	6,200

① ₩86,200 ② ₩86,600 ③ ₩87,000 ④ ₩87,200 ⑤ ₩87,600

20.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ㅇ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ㅇ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20×2년 감가상각비	20×3년 말 장부금액
①	₩9,000	₩15,500
②	₩9,000	₩17,100
③	₩9,750	₩15,500
④	₩9,750	₩17,100
⑤	₩12,000	₩17,100

21.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일자	금액
20×1년 1월 1일	₩10,000
20×1년 7월 1일	7,000

○ 차입금 현황

종류	금액	이자율	차입기간
특정차입금	₩10,000	5%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일반차입금A	1,000	8%	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일반차입금B	3,000	6%	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① ₩640 ② ₩728 ③ ₩745 ④ ₩760 ⑤ ₩990

22. (주)세무의 보통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발행가 ₩6,500)와 관련된 거래가 다음과 같이 발생했을 때, 20×1년 4월 30일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회계처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거래일자	주식수	주당 재취득금액	주당 재발행금액
20×1년 3월 1일	50	₩6,800	-
20×1년 4월 1일	20	5,600	-
20×1년 4월 21일	30	-	₩6,900
20×1년 4월 30일	10	-	4,800

	(차변)		(대변)	
①	현금	48,000	자기주식	68,000
	자기주식처분이익	3,000		
	자기주식처분손실	17,000		
②	현금	48,000	자기주식	68,000
	자기주식처분손실	20,000		
③	현금	48,000	자기주식	56,000
	자기주식처분손실	8,000		
④	현금	48,000	자기주식	50,000
	감자차익	2,000		
⑤	현금	48,000	자기주식	50,000
	감자차손	2,000		

23.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20×2년 초 전환사채 전부를 ₩1,070,000(상환시점의 공정가치)에 조기상환하였다. 이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현가계수표를 이용하며, 현가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연 4%
○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8%
○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조기상환일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 연 15%
○ 상환할증금: 없음
○ 발행 시 주식전환 옵션은 전환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
○ 현가계수

할인율 /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5%	8%	15%
2	0.85733	0.75614	1.78326	1.62571
3	0.79383	0.65752	2.57710	2.28323

① 발행 당시 전환권대가는 ₩103,086이다.

② 20×1년도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31,753이다.

③ 20×2년 초 장부금액은 ₩928,667이다.

④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일에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821,168이다.

⑤ 20×2년 전환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사채상환손실은 ₩38,247이다.

24. 자본 및 자본유지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유지개념은 이익이 측정되는 준거기준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본에 대한 투자수익과 투자회수를 구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②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서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③ 자본을 불변구매력 단위로 정의한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는 일반물가수준에 따른 가격상승을 초과하는 자산가격의 증가 부분만이 이익으로 간주된다.

④ 재무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실물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⑤ 자본을 실물생산능력으로 정의한 실물자본유지개념 하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격변동은 해당 기업의 실물생산능력에 대한 측정치의 변동으로 간주되어 이익이 아니라 자본의 일부로 처리된다.

25. 농림어업 기준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의 인식시점에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② 생물자산을 이전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였다면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③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④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⑤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식물이다.

2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에는 4,000단위를 생산하였고, 20×2년에는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5,000 많았다.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수량/금액
기초제품 수량		( )단위
생산량		4,000단위
기말제품 수량		1,200단위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80
	직접노무원가	40
	변동제조간접원가	30
	변동판매관리비	1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20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0

(주)세무의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① 500단위 ② 650단위 ③ 700단위 ④ 950단위 ⑤ 1,700단위

27. (주)세무는 원가행태를 추정하기 위해 고저점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경영자는 추정된 원가함수를 토대로 7월의 목표이익을 ₩167,500으로 설정하였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추정 목표매출액은? (단, 당월 생산된 제품은 당월에 전량 판매되고, 추정 목표매출액은 관련범위 내에 있다.)

월	총원가	총매출액
3월	₩887,000	₩980,000
4월	791,000	855,000
5월	985,500	1,100,000
6월	980,000	1,125,000

① ₩1,160,000 ② ₩1,165,000 ③ ₩1,170,000 ④ ₩1,180,000 ⑤ ₩1,200,000

28.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기본원가(prime costs)의 50%를 예정 배부한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9월의 기본원가, 매출액과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본원가	₩750,000	매출액	₩1,000,000
기말재공품	120,000	기말제품	180,000

9월의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율이 80%일 때, 배부차이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① ₩10,000 과대배부 ② ₩15,000 과소배부 ③ ₩15,000 과대배부
④ ₩25,000 과소배부 ⑤ ₩25,000 과대배부

29. (주)세무는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1년 직접재료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20,000단위, 전환원가에 대한 총완성품환산량은 18,000단위, 완성품 수량은 15,000단위이다. 20×1년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① 50% ② 60% ③ 75% ④ 80% ⑤ 90%

30.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 제공부문	보조부문		제조부문		용역생산량
	A	B	P	Q	
A	10%	40%	20%	30%	1,000단위
B	20%	10%	40%	30%	2,000단위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③ (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 (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⑤ (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31.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세무는 전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1년과 20×2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20×1년	20×2년
제품 생산량	1,500단위	1,750단위
제품 판매량	1,200단위	( )단위
기말제품 수량	( )단위	150단위
제품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8	₩40
고정제조간접원가	₩48,000	₩70,000

(주)세무의 20×2년도 매출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① ₩147,000 ② ₩148,000 ③ ₩148,600 ④ ₩149,000 ⑤ ₩149,400

32. (주)세무는 주산품 A, B와 부산품S를 생산한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9,500이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며, 당기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A	₩2,000	₩40	200단위	180단위
B	1,000	20	250	200
S	500	15	100	90

주산품B의 매출총이익은? (단, 기초 재고자산은 없으며, 부산품S는 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① ₩480 ② ₩560 ③ ₩580 ④ ₩750 ⑤ ₩810

33. (주)세무는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20×2년도 기초제품 수량은 100단위, 생산량은 2,000단위, 판매량은 1,800단위이다. 20×2년의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250
	직접재료원가	30
	직접노무원가	50
	변동제조간접원가	60
	변동판매관리비	15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		₩50,0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		10,000

20×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초변동원가계산(throughput costing)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금액은? (단, 20×1년과 20×2년의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는 동일하고,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① ₩10,000 ② ₩11,000 ③ ₩20,000 ④ ₩22,000 ⑤ ₩33,000

34.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투입하여 두 개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1공정에서는 직접재료 1톤을 투입하여 제품A 400kg과 중간제품M 600kg을 생산하며, 제2공정에서는 중간제품M을 가공하여 제품B 600kg을 생산한다. 직접재료는 제1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모든 공정에서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1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200/톤, 고정원가는 ₩70,000이 발생하였으며, 제2공정에서는 변동전환원가가 ₩1,200/톤, 고정원가는 ₩58,000이 발생하였다. 직접재료 구입원가는 ₩2,000/톤이며, 제품A와 B의 판매가격은 각각 ₩3,000/톤, ₩5,000/톤이다. 생산된 모든 제품이 전량 판매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40톤	60톤	②	48톤	72톤	③	50톤	75톤
④	60톤	90톤	⑤	80톤	120톤			

35. (주)세무는 두 종류의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한다. 두 제품의 월간 예상 판매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제품A	제품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50	₩45
	변동제조원가	32	25
	고정제조간접원가	5	7
	변동판매관리비	8	5
	고정판매관리비	2	2
기계시간당 생산량		4단위	2단위
월간 예상수요량		120단위	80단위

(주)세무의 월간 최대 사용가능한 기계시간은 50시간이다. (주)세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월 최적 제품배합은? (단, 월간 고정원가 총액은 일정하다.)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제품A	제품B
①	40단위	80단위	②	60단위	70단위	③	80단위	60단위
④	100단위	50단위	⑤	120단위	40단위			

36. (주)세무는 20×1년 초에 설립되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피커를 생산하고 있다. 스피커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0이며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00,000이다. (주)세무는 당기에 국내시장에서 스피커 300단위를 판매하고,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고 남는 스피커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스피커의 국내 판매가격은 단위당 ₩10,000이며, 해외 판매가격은 단위당 ₩9,000이다. 해외시장에 판매하더라도 원가구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① 350단위 ② 375단위 ③ 400단위 ④ 450단위 ⑤ 500단위

37. (주)세무는 20×1년에 제품A를 5,000단위 생산하여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7,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1,000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A 3,000단위를 단위당 ₩8,0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해외 거래처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제품A 1단위당 부품B(단위당 외부구입가격: ₩500) 1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20×1년도 국내시장 판매량을 350단위 감소시켜야 한다. 특별주문과 관련된 판매관리비는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300,000 발생한다. (주)세무가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20×1년도 예산이익의 증가(또는 감소) 금액은? (단, 특별주문은 전량 수락하든지 기각해야 한다.)

① ₩300,000 증가 ② ₩420,000 증가 ③ ₩500,000 증가
④ ₩550,000 감소 ⑤ ₩800,000 감소

38.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사용부문 / 제공부문	제조부문			보조부문	
	P1	P2	P3	S1	S2
S1	40%	20%	20%	-	20%
S2	30%	30%	30%	10%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S1	S2		S1	S2
①	₩100,000	₩290,000	②	₩120,000	₩270,000
③	₩150,000	₩300,000	④	₩270,000	₩120,000
⑤	₩300,000	₩150,000			

39.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년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300,000이고,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800,000이다. (주)세무는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으로 직접노무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 1,000시간이고, 20×1년에 실제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850시간이다. 20×1년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가 ₩80,000(불리)할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① ₩15,000 유리 ② ₩45,000 유리 ③ ₩10,000 불리
④ ₩15,000 불리 ⑤ ₩45,000 불리

40. (주)세무는 직접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직접재료의 20%가 제조과정에서 증발되는데, 이러한 증발은 정상적이며 제조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완성품 1단위에는 직접재료 0.1kg이 포함되어 있고, 당기에 2,000단위가 완성되었다. 당기에 투입된 직접재료는 190kg, 기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5%)은 38kg, 기초재공품은 90kg이었다. 기초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는? (단, 공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25% ② 30% ③ 40% ④ 50% ⑤ 60%

행정소송법

41. 판례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은 허용된다.

② 처분청이 그 처분에 관하여 행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고소송은 허용된다.

③ 구(舊)「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갖는 생활환경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④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을 허가한 경우 기존 영업자는 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당사자가 행정청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 그 행정행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42.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

②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판결을 한다.

③ 판결서의 형식은「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⑤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43.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민건강보험법」상 과다본인부담금확인 처분 등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진료행위시와 처분시 사이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처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④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결정은 가입자가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⑤ 세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44.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ㄴ.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ㄷ.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5.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② 각급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급법원은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 행정소송에 관하여「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법원조직법」과「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 항고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46. 판례상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당연퇴직인사발령

②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행위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④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

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7.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48.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한다.

③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49. 원고적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④ 민중소송은 직접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그 처분등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0. 다음은 행정소송법 조문 중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ㄱ)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ㄴ)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① ㄱ: 28, ㄴ: 60 ② ㄱ: 30, ㄴ: 45 ③ ㄱ: 30, ㄴ: 60

④ ㄱ: 45, ㄴ: 60 ⑤ ㄱ: 45, ㄴ: 90

51. 과세관청이 甲에게 2018.2.1. 5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8.3.15. 7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 다시 2018.4.20. 600만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경우 甲이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8.2.1. 600만원의 처분 ② 2018.3.15. 600만원의 처분

③ 2018.3.15. 700만원의 처분 ④ 2018.4.20. 600만원의 처분

⑤ 2018.4.20. 700만원의 처분

52. 판례상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된 것은?

① 시세완납증명서발급거부처분 사유로서, 중기취득세체납에서 자동차세체납으로 변경

②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변경

③ 주류도매업허가의 취소사유로서, 무자료 주류판매에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로 변경

④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변경

⑤ 온천발견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서, 규정온도 미달에서 공공사업에의 지장등으로 변경

53.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공익소송이다.

② 개인의 법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선거인이라는 지위만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제기할 수 있는 주관적 소송이다.

④ 법률상 특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권자로서의 지위만 있으면 제기할 수 있다.

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4. 판례상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① 지방의회 의원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중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월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③ 치과의사국가시험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가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⑤ 서울대학교 불합격처분의 취소소송 계속중 당해 연도의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

55.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③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⑤ 확정된 종국판결은 그 기판력으로서 당사자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56. 판례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3자의 소송참가의 성질은?

① 공동소송 ② 보조참가 ③ 공동소송참가

④ 독립당사자 참가 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 판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②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는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제기 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소의 이익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8. 행정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②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행정청이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만으로 위법판단을 해야 한다.

③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④ 난민인정거부처분이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와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9. 항고소송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②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③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④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6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④ 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6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하였다. A회사는 확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①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②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③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62.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
> 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그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
> ㄷ. 수인이 각각 별도로 제기한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ㄹ. 경원자에 대한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자신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①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3.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②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④ 항고소송에는 이행판결이 존재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이다.

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③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65. 취소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⑤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속한 다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66.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②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③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⑤ 원고의 신청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7. 판례상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③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④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행정청이 된다.

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68.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②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③ 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69.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무이행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기관소송

④ 민중소송 ⑤ 항고소송

70. 소송의 이송 및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과 편의에 의한 이송 및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 인정된다.

②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되어도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③ 주된 청구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의 원·피고가 동일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71.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②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세무조사결정

④ 표준지공시지가결정

⑤ 교도소재소자의 이송조치

72. 다음 사례에서 甲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으로 적법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시의 일정구역의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 준비를 하였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주민 등의 동의를 얻어 설립결의를 거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A시의 시장 乙은 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 주민 甲 등 일부 주민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①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②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③ 조합을 피고로 설립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④ 乙을 피고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

⑤ A시를 피고로 설립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당사자소송

73.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② 사정판결은 공익을 위해 널리 활용되어져야 한다.

③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이다.

④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원고가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그 배상방법을 판결 이후에 조사·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7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요건사실과 입증책임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원인사실 - 과세관청

② 납세처분이 피고지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사실 - 과세관청

③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비용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④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사실 - 납세의무자

⑤ 당해 과세처분이 절차적 적법요건을 구비한 것이라는 사실 - 과세관청

7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76.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의 해지

② 행정청에 의한 공법상 계약상대방의 결정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

④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77.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의 수용에 관계되는 당사자소송은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78.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세무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쟁사건의 관할이 행정법원인 경우 당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관할위반이다.

⑤ 관할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79.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③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으로 본안소송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불가능하다.

80. 취소소송에서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초과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ㄴ. 초과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우
ㄷ.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음전하여 적발되어 3종의 면허가 모두 취소된 경우
ㄹ.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